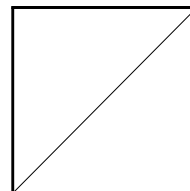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44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3. 2. (제4차)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

제출자	위원장 김주현
제출연월일	2023. 3. 2.

1. 의결주문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팀장 ○○○ 및 이사 □□□에 대해 주의 요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불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2차 제재심의위원회(2022.11.11.) 심의필
- 제4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2.23.) 심의필

< 별지 >

(인천)인천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직원에 대한 조치 : 팀장 ○○○ 및 이사 □□□에 대해 주의 요구

2. 조치사유

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

(1)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故△△△ 명의 요구불예금 ●계좌(예금액 ●원) 및 정기예금 ●계좌(예금액 ●●.●백만원)를 공동상속인(◇◇◇, ◆◆◆, ★★, ☆☆☆)의 대리인 ▲▲▲의 신청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공동상속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인 ▲▲▲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한 충분한 확인없이* 그의 신청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인 ◇◇◇ 명의로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을 지급하였음

- *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에 의하면 실명확인시 백지위임장은 사용할 수 없고, 본인·상속인의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①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은 백지위임장이었고, ② 대리인이 제출한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나 상속 재산분할협의서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확인하지 아니함

(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국세청 등의 요구로 ■■■■ 등 ●명의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명의인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등 ●명) 최대 ●●●일 지연 통보(▽▽▽ 등 ●명) 하였음

- (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 ①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x. 기간 중 국세청 등으로부터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하다는 등의 사유로 ♀♀♀ 등 ●●명의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았음에도 각 유예요청기간 중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였음

(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 목적, 제공자,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인천)인천저축은행은

20xx.x.xx. ~ 20xx.x.x. 기간 중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건의 거래정보등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제공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의2, 제4조의3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 별지 제4호 서식

관 계 법 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 ⑤ (생략)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 1의2. 사용 목적(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6.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② ~ ③ (생략)

제5조의2(행정처분)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 5. (생략)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이하 생략)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 (생략)

②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제5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div>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 기록관리부 (법 제4조의3) </div>																	
(보관기간 : 5년)																	
관리 번호	요구 일자	요구 기관	요 구 자 인적사항		사용 목적	법적 근거	요구받은 인적사항	요구받은 거래정보 등의 내용	제공 일자	제 공 자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	명의인 에게 통보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			
			담 당 자	책 임 자			제 공 된 인적사항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담 당 자	책 임 자			통보 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횟수
<div> 1. 사용목적 :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 2. 요구받은 인적사항 및 제공한 인적사항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각호의1을 의미 3. 통보를 유예한 경우 사유 : 법 제4조의2 제2항 각호중 해당번호를 기재 </div>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각호 생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② ~ ③ (생략)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액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의 관계
7.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
8.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공통부분

I-1. 금융실명법 위반행위

1. 관련자의 구분

금융실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②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③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2. 관련자에 대한 조치기준

① 법 제3조 위반행위(금융실명거래 위반)

거래금액(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금액. 다만 증권거래계좌의 경우에는 입금액을 말한다)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유형①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 위반

(단순절차 위반행위 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② (생 략)

③ 법 제4조의2(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및 법 제4조의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의무) 위반행위

책임정도	행위자	보조자	감독자
고의	견책 ~ 감봉1월	견책 이하	주의
과실	주의	주의	주의

3. ~ 4. (생 략)

5. 가중 및 감경

가. 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나.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다. <삭 제, 2016.2.29.>

라. 단위부·점내에서 위반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마. 경미한 위반으로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저축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982	02-3145-7385